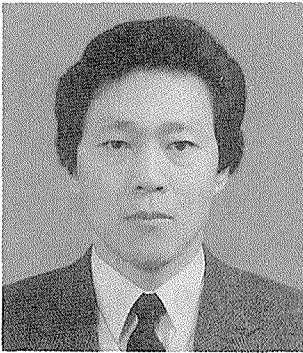


석유산업의 사회적 책임



김 태 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자원경제학>

우루과이 라운드가
국내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선진국의
압력의 서막이라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는
한국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본격적인
압력이 될 것이다.

석유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총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 에너지원이며 이를 도입, 정제, 판매하고 있는 5대 정유사의 연간 매출액은 총 12조원에 달한다. 요즘 대학 졸업생들의 직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정유사들이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사회의 인식도 가장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중의 하나로 정유업을 꼽고 있다. 이는 석유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공헌하는 민생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인 산업 에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직접석유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산업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연관효과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체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대량생산사회를 대표하는 자동차, 철강, 중화학산업 등의 기간산업들이 모두 석유를 활용함으로써만 발전·성숙할 수 있었던 사실은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Standard oil)가 내포하는 정유산업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기간산업들이 서로 연계 발전하였던 미국 근대 경제사가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업계의 경제내 증추적 위상으로 미루어 볼때, 이제는 업계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업계를 둘러싼 국가적, 국제적 상황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민족사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며 안 될 많은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다. 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쌀시장 개방 문제로 대변되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국내 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의 서막이라면, 머지 않아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탄산가스(CO₂) 발생량을 규제하자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게 될 국제협약의 발효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을 압박하여 제품생산 및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본격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여러가지 필요조건들이 존재 하겠지만, 결국 공장을 가동시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하는 충분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견지에서 석유산업이 현대산업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특히 석유정책의 성과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의 우리나라 석유정책은 제 1, 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수급안정이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석유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80년대 후반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화되는 등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으로 인하여 석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정치적인 초단기 목표를 달성하고자 진지한 정책적 연구나 이론적 기반도 없이 정유업 수익률 규제의 과도한 적용과 함께 에너지 가격 특히 석유가격을 수차례에 걸쳐서 인하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고, 이때 일부 저유가 추세에 안주하는 정책결정자의 안이한 자세와 석유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본식견이 부족한 학계인사의 무책임한 저유가 주장 편승이 결국 우리 산업을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로 전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낭비 및 과소비 풍조를 우리 사회에 만연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 몇년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기록적인 수치(석유류 소비증가율 : 연평균 17.64% : 1989~1992)를 보였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저유가 정책기조의 악영향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기간이, 우리 경제가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에서 한마리의 지렁이로 전락했다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받게된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거둬 논할 필요도 없이, 거대한 초기 투자와 장대한 투자회임기간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석유정책은 그 정책수행 구간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정책이 장기종합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관성있게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안정이나 연도별 분기별 물가상승률을 하향조정하는 일회용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그간의 솔직한 사정이다. 동력자원행정에 숙련된 뜻있는 관료의 정책의지는 정치적 결정 과정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하였고, 학계의 올바른 연구결과와 정책건의는 무책임한 저유가의 단순논리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결국 장래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을 오늘 유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편하기 위해서 내일로 부담을 돌리는 오류, 즉 지금 세대가 아직 오지도 않은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세대간 합리적 자원배분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저유가의 정책기조가 만연하던 당시 - 지금도 그 저간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이미 연간 총

과거 일부 저유가 추세에 안주하는 정책결정자의 안이한 자세와 에너지에 대한 기본식견이 부족한 학계인사의 무책임한 저유가 주장 편승이 결국 우리산업을 에너지 과소비형 구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동안 업계가 수많은
건의사항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합리적 기준이 될만한
정책자료나 공정하고
타당한 연구를
수행케하여
정책입안자나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매출액이 7조원(1985년)을 상회하여 무려 국민총생산(GNP)의 9%에 달하던 거대기업인 정유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정유업계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요구사항들만을 단순히 나열하고 소리 높여 외쳐대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의 극단적인 의사표현 방법보다 별로 더 나은 것이 없다. 과도한 이윤을 규제의 완화, 민간비축비용의 유가반영, 여신규제의 완화, 해외 차입국제 및 해외 증권발행제한의 완화 시설고도화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및 법인세 공제제도의 도입등 그동안 정유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전혀 근거 없다거나 경우에 닿지 않는 요구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이 될만한 정책자료를 제시하였거나, 공정하고 타당한 연구를 수행케 하여 정책입안자나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기업과 국민대중이 한데 어우러져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함으로써 점점 더 첨예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의 불확화와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국가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석유정책을 수립하여 정유업계가 스스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여야겠다는 생각이나마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하여 되묻고자 함이다. 사회나 국민들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일체 언급됨이 없이 요구사항만 반복 나열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한 근간을 이루는 기업으로서, 그것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거대기업으로서 전혀 성숙치 못한 태도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구하다.

가령 「유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건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아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에 걸맞고 미래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유가의 개념과 석유제품가격의 적정수준을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대안없는 이기적인 건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기왕의 예를 한가지 더 들어보면, 「이윤율(현행 자기자본의 10%)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의 경우에도 손쉬운 자본분석, 타산업과의 수익률수준비교 등의 단편적인 회계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국민경제적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유산업의 특성을 공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엄밀히 고려할때 적정 이윤율이 어떤수준이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대체할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충실히 정책에 반영시키고 일반의 이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조목조목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불만을 해소해야 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이 되면 남에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불만스러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합리적 근거와 남들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유인을 가진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석유산업은 그 연료이나 규모로 보건대 위에서 예를 든 사리를 알만한 나이의 청장년기에 접어들었음에 틀림없으나, 늘 객관적 대안없는 요구와 건의만을 남발할 때 몸집만 거대한 어린 아이로 밖에 취급 받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최근 석유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업계로 하여금 발빠른 현실 대응과 먼 장래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제시의 모든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무연회발유와 경유 특소세가 현행 109%, 9%에서 각각 150%, 20% 정도로 상향조정되어 도로망 확충 및 정비, 도시전철의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목적세의 개념으로 사용될 전망이며, 게다가 개정개혁부문과제의 일환으로서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6개 기금제도가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로 개편·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부문의 타부문의 중속과 장기적 정책비중축소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석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학계, 연구계 등 석유 및 에너지산업에 애착을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다.

현재 결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석유업계를 둘러싼 급박한 국내외 에너지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모두 합심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안목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새출발을 하여야 할 때이다. 지금 석유업계의 당면과제는 유가정책의 합리화, 저조한 수익성의 극복, 막대한 시설투자재원의 확보, 유통체계의 효율성 확립등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제고, 환경규제등 변화하는 상황에의 적응, 국제화 및 개방화에의 대비 등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다. 누가 대안을 준비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누가 석유산업 전반을 가장 잘 알며, 가장 긴요한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지적해낼 수 있는가? 이제 석유업계는 성장과 이윤추구의 두가지 좌표에만 의지하여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중소기업의 차원을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석유산업의 합리적인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아가는 국민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단계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이제 석유산업은
성장과 이윤추구에만
의지하여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차원을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